

# 제7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

2022. 3. 11.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3월 11일(금) 15:38~16:22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 4. 회의경과

###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 개회를 선언함.

#### 1)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3호 『(주)셀트리온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4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5호 『(주)셀트리온제약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일괄 재상정함.

○ (위원장) 동 안건은 그동안 임시 증선위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음. 증선위의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에게 각각의 지적사항별로 정리하도록 하였는바, 기업회계팀장은 증선위 결정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보고자) 먼저, 사실관계 판단사항을 말씀드리겠음. 첫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을 위한 그룹차원의 고의 회계분식이었는지 여부임. 금감원은 (주)셀트리온헬스케어 신규 상장('17년, 코스닥)을 위해 셀트리온그룹이 의도적으로 계열사간

손익을 조작했다는 입장임. 이는 재무적 투자자(이하 FI)와의 약정상 2016년까지 반드시 상장을 신청했어야 했으며, 기업가치는 6조 원 이상을 목표로 했다는 점과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재고자산의 유효기간 경과 가능성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판매가능하다고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였음. 한국거래소의 의견은 (주)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 경로(대형법인)상 당기순이익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램시마를 중심으로 기업계속성 심사를 수행했다고 하였음. 감리위원회 의견은 상장요건 감안시 당기순이익을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오류도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음. 증선위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요건 및 FI와의 약정 충족을 위해 그룹 전체가 회계분식을 자행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그 이유로, 첫째, FI의 풋옵션행사가격이 장외시장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아 FI가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점, 둘째, (주)셀트리온헬스케어는 ‘대형법인’에 해당되어 손실발생시에도 상장이 가능하다는 점, 셋째, 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상장요건이나 상장시 질적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점 감안시 고의적 허위자료 제출로 의율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음. 다음은 허쥬마 100A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임. 금감원 의견은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허쥬마 100A의 유효기간은 48개월로 2016년말 시점에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입장임. 2016년말 시점에 100A는 EMA와 FDA 등으로부터 승인 받은 유효기간이 없었으므로 유효기간은 48개월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음. 식약처는 원칙적으로 승인 받은 유효기간 도과 前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도과

후 소급적용은 불가('22.1.5.공문)하다는 입장임. 다만, 의약품 변경허가 전 생산제품은 변경허가 후 변경사항이 적합하다면 판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18.9.4. 공문)고 하였음. EMA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품출하 前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으면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외부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감리위원회는 다수의 위원이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심의하였음. 그 이유로 식약처의 사후적인 유효기간 연장 및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공문과 EMA와 FDA의 경우 유효기간에 대해 유연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였음. 증선위는 한국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며, 해외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한국의 경우 식약처 의견과 같이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됨. 2018년 공문의 단서조항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심의하였음. 해외의 경우 EMA는 원칙적으로 제품출하 시점으로 유효기간을 판단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EMA로부터 유효기간 소급적용을 받은 실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였음. 다음은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심의내용임. 첫째, 재고자산(허쥬마) 평가손실 미계상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음. 지적사항은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2016년말 보유중인 허쥬마(100A)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외부판매가 불가능함에도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음. EMA의 의견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품출하 前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으면,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외부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임. 감리위원회는 다수의 위원이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자문하였음. EMA에 의하면 유효기간 연장 및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판매계

획은 없었지만 판매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였음. 증선위는 허쥬마 100A는 재고자산평가손실 대상에 해  
 당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어 지적사항에서 제외  
 하기로 하였음. 유효기간 측면에서 EMA는 판매 전에만 적  
 합한 데이터를 갖추어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었고, 판매가능성 측면 셀트리온그룹은 일부 국가(2개  
 국)에서 100A 판매허가 승인을 받았고, 일부 국가에서는 허  
 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 구체적인 판매계획이 확인되  
 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만으로 판매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음. 다음은 인식 측면임. (주)셀  
 트리온헬스케어는 (주)셀트리온이 100A 재고를 교환해 줄 것  
 이라고 기대한 정황이 있어 100A가 판매 불능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감사인에 대  
 해서는 회사와 동일하게 지적을 제외하기로 하였음. 두 번  
 째, 특수관계자 주식 미기재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적사항은  
 판매가능재고와 판매불능재고를 비정상적으로 교환하고 고  
 의적으로 은폐하였다는 것임. 회계기준원의 의견은 교환거래  
 가 특수관계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고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라면 공시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  
 였음. 감리위원회는 다수의 위원이 회계기준 위반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였지만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자문하였음.  
 일부 위원은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중과실’, 일부 위원  
 은 ‘과실’이라고 판단하였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금감원 원안  
 에 동의하였음. 증선위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서는 고  
 의적 회계기준위반으로 보지 않았고 ‘중과실’로 판단하였음.  
 그 이유는 첫째, 재고교환은 정형화된 공시대상이 아니며 반  
 품이 공시 대상인지의 여부는 검토한 점 감안시 위법가능성

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둘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유리한 교환사실인 만큼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고의적으로 주석을 누락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허쥬마 100A와 200A, 트룩시마 220C와 230C가 허가 관점에서는 동종품목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외부감사인에게 품목별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회계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점과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 과다보유가 당시 시장의 주요 관심사항이므로 재고 교환 발생 정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라는 측면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위반동기는 '중과실'로 수정하였음. 한편, 감사인에 대해서는 원안에 동의하였음. 세 번째, 해외유통사에 대한 사후정산관련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관련 사항임. 지적사항은 해외유통사에 판매한 제품가격이 하락하여 사후정산(대금지급)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매출조정 회계처리를 고의로 누락하였다는 점임. 회계기준원의 의견은 분기별 순매출보고서 또는 구매주문서 등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연말에 매출조정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감리위원회 의견은 다수의 위원이 회계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음. 일부 위원은 '중과실', 일부 위원은 '과실'로 판단하였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금감원 원안에 동의하였음. 증선위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적금액 및 위반동기를 수정하기로 하였음. 지적금액은 순매출보고서가 아닌 구매주문서 단가로 지적금액을 수정하기로 하였음. 그 이유는 첫째, 순매출보고서만이 신뢰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부족하였고 둘째, ○○○가 합리적 추정 없이 구매주문서를 높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구매주문서가 시장가격을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임. 세 번째, 구매주문서 단가도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정책으로 채택되었다면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음. (주)셀트리온헬스케어 위반 동기에 대해서는 고의적 회계위반으로 볼 수 없고, ‘중과실’로 판단하였음. 그 이유는 첫째, 2015년부터 일관되게 회계처리를 하였고, 감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주)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위반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고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음. 다만,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3분기 보고서를 통해 거액의 지급액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K-IFRS 제1018호 수익기준서에 대한 검토가 없었고, 분기별평균가격보고서가 단지 신뢰할 수 없다는 자의적 해석 이후 추가 검토를 미수행하였다는 점에서 2014년부터 2016년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수정하였음. 감사인에 대해서는 원안에 동의하였음. 네 번째, ○○○자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과소)계상 관련된 사항임. 지적사항은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자회사(‘13년)에 판매한 램시마 매출은 회계상 2013년에 매출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회계기준원의 의견도 ○○○자회사의 승인 없이 ○○○자회사에게 판매하기로 한 재화를 임의로 교체할 권리가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있다면 2013년말 시점에 재화에 대한 통제가 ○○○자회사로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감리위원회는 다수의 위원이 금감원 원안에 대해 동의하였음. 증선위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는 원안에 동의하였지만 감사인의 위반동기를 수정하였음. (주)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위반동기에 대해 금감원 원안에 동의하였음. 그 이유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는 GMP규정에 따라 향후 ○○○자회사 재고



가 아닌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다른 완제의약품이 출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2013년말 원료의약품의 통제권 이전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자회사는 재고자산 통제권을 행사할 독립적 실체로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통제 관련 경제적 실질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었음. 감사인은 위반동기를 ‘과실’로 조정하였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미인도청구 판매 기준 자체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임. 두 번째, 바이오전문가가 아닌 감사인이 GMP 규정상 유효기간이 먼저 도래된 약품을 먼저 출하시키는 원칙인 FEFO기준에 의한 기중 재고교체 사실까지 통상적인 감사절차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임.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주)셀트리온헬스케어 감사인의 위반동기를 ‘과실’로 수정하였음. 다섯 번째, ○○○○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과소)계상임. 지적사항은 (주가 ○○○○(‘10년)에 판매한 램시마 등의 매출은 회계상 2010년에 매출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임. 회계기준원의 의견은 ○○○자회사에 대한 매출과 동일함. 감리위원회 의견도 회계기준 위반이며, 금감원 원안에 동의한다고 자문하였음. 증선위 논의 결과도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및 감사인 원안에 동의하였음. 여섯 번째, 국내판매권 매각 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한 사안임. 지적사항임.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국내 판권 매각수익은 영업외수익임에도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영업수익(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하였다고 ‘중과실’로 지적하였음. 회계기준원의 의견은 판매권 매각이 주된 영업활동이라면 영업수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감리위원회 의견도 회계기준 위반은 맞지만 ‘과실’이 타당하다고 자문하였음. 증선위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와 감사인의

위반 동기를 각각 ‘과실’로 수정하였음. 그 이유는 정관상 사업목적에 명백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특수관계자 주식에는 판매권 양도거래를 기재하였으며, 위반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임. 이제부터는 (주)셀트리온에 대한 심의결과임. 첫 번째, 개발비 과대계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음. 지적사항 (주)셀트리온이 ‘고의’로 판매불능재고(허쥬마100A, 트룩시마220C) 소진을 위해 배송공정(운송밸리데이션)에 과도하게 투입하고 개발비로 처리하였다는 것임. 식약처의 의견은 운송밸리데이션은 실제 또는 모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고, 허가前 제조된 제품이나 유효기간 경과된 제품이더라도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회계기준원은 운송밸리데이션이 판매를 위한 필수절차라면 개발비, 대체안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활동은 개발비가 아니며, 이미 평가손실을 인식한 재고는 개발목적으로 인해 목적이 바뀌었다고 해서 환입할 수 없다고 자문하였음. 감리위원회는 다수의 위원이 판매허가 목적의 운송밸리데이션에 사용된 허쥬마는 지적에서 제외하였고 (주)셀트리온의 위반동기는 ‘중과실’이 타당하다고 자문하였음. 증선위는 지적금액과 (주)셀트리온의 위반동기를 수정하였음. 먼저, 지적금액은 판매허가 목적을 위해 사용한 허쥬마 100A 111억원은 개발비로 인식 할 수 있으므로 지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좀 더 세부적으로는 회계기준원 의견에 따라 판매허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운송밸리데이션은 개발비로 인식 가능(허쥬마DS, 트룩시마DS)하다고 판단하였고, 트룩시마 220C는 이미 평가손실을 인식한 재고로 판매가치가 회복된 것이 아

니므로 환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음. 다음 물류비 절감 목적의 운송밸리데이션 사용 재고는 운송수단과 관련된 대체안 탐색으로 판단되므로 개발비 인식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감사인의 지적금액에 대해서도 (주)셀트리온과 동일하게 수정하였음. 다음 (주)셀트리온의 위반동기에 대해서는 고의적 회계위반으로 볼 수 없고, '중과실'로 판단하였음. (주)셀트리온은 운송밸리데이션 투입 재고를 일관되게 개발비로 회계처리하였고, 감사인 등으로부터 의견이 없었던 점, 유효기간 경과제품 및 모의제품 사용도 가능하므로 (주)셀트리온이 개발비 인식 불가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고의'로 볼 수는 없지만 새로운 프로젝트에 다량의 재고자산이 사용됨에도 연구·개발단계 여부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지 않았고 재고자산 환입과 관련하여 기준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회계처리 하는 등 회계처리과정에서 합리성을 현저히 결했다는 측면과 일부 회계연도는 개발비를 핵심감사 사항으로 선정하는 등 개발비 인식 여부는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보라는 점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주)셀트리온의 위반동기는 '중과실'로 수정하였음. 두 번째, 특수관계자 주식 미기재와 관련된 사항임. 지적사항은 (주)셀트리온헬스케어와 동일하게 판매가능재고와 판매불능재고를 비정상적으로 교환하고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다는 것임. 회계기준원은 교환거래가 특수관계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고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라면 공시 대상에 해당된다면서 회계기준에는 교환의 공시금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환의 상업적 실질이 있다면 매매가,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원가로 공시하는 것이 맞겠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음. 감리위는 다수의 위원이 고의성을 인

정하기 어렵고 허쥬마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없는 만큼 지적금액을 원가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자문하였음. 일부 위원은 ‘중과실’ 의견, 일부 위원은 ‘과실’ 의견이었음. 증선위는 지적금액과 (주)셀트리온의 위반동기를 수정심의하였음. 지적금액임. 허쥬마의 교환은 지적금액을 매매가가 아닌 원가로 수정하였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 번째, 회계기준원 의견에 따라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는 상업적 실질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과 두 번째 (주)셀트리온은 운송밸리데이션에 투입할 200A를 100A와 교환하여 운송밸리데이션에 투입하였으므로 교환대상인 100A, 200A로부터 미래에 얻을 경제적 효익이 동일하다는 점, 세 번째, (주)셀트리온 입장에서 경제적 손실은 현시점의 원가이며, 과거 시점의 판매가는 현재의 정보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었음. 다음 (주)셀트리온의 위반동기에 대해서는 고의적 회계위반으로 볼 수 없고, ‘중과실’로 심의하였음. 그 이유는 첫째, 재고교환은 정형화된 공시대상이 아니며, 감사인에게 교환사실은 알린 점 감안 시 주식 공시 누락의 위반가능성을 사전에 (주)셀트리온이 인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두 번째 교환된 재고가 의학적으로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물류비 절감 목적의 운송밸리데이션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오래된 재고를 폐기처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품을 교환하고 사실을 은폐했다고 의율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임. 다만, 계약상 교환 근거가 모호하고 다량의 재고교환이 있었음에도 회계기준 적용과정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등 검토에 소홀하였고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 과다보유가 당시 시장의 주요 관심사항이었으므로 재고 교환 발생 정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

라는 측면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셀트리온의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수정하였음. 감사인은 지적금액은 (주)셀트리온과 동일하게 수정하되, 위반동기는 원안에 동의하였음. 세번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관련 사항임. 지적사항임. (주)셀트리온과 (주)셀트리온헬스케어는 바이오시밀러 공동개발자로 고객이 아니므로 (주)셀트리온이 제품을 인도하더라도 회계상 매출을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이었음. 회계기준원은 고객여부 판단 시 제품개발 실패 위험, 제조위험(불량, 화재), 재고위험(미판매 위험 등)과 매출채권 회수위험(대금회수 위험) 등을 양사가 공유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임. 감리위원회는 다수 위원이 (주)셀트리온과 (주)셀트리온헬스케어는 재고위험, 매출채권 회수위험 등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만큼 (주)셀트리온헬스케어는 (주)셀트리온의 고객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인다고 자문하였음. 증선위는 (주)셀트리온과 감사인을 지적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지적 기준시점에 판매양태의 중대한 변경이 없음에도 K-IFRS 제1115호 도입, 양사 간 정산방식의 일부 변경이라는 사실만으로 고객으로서의 성격이 변경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임. 둘째, 회계기준원에서 제시한 4가지 위험 공유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주)셀트리온과 위험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공동개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임. 보다 상세하게 제품개발 실패위험은 판매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제조위험도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부담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재고위험은 정산시점까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재고의 미판매위험은 판매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부담

하고 있어 양 사가 재고위험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공유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음. 감사인에 대해서도 (주)셀트리온과 동일하게 지적사항에서 제외하였음. 다음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 지연 인식임. 지적사항은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트룩시마 220C 매출('14년)은 회계상 2013년 매출에 해당함에도 (주)셀트리온은 2014년에 매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중과실'로 지적하였음. 감리위는 다수의 위원이 회계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자문하였음. 증선위 논의결과는 (주)셀트리온과 감사인의 지적사항에서 제외하기로 심의하였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트룩시마 210C의 실패사례 감안시 220C의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일정 기간 안정성데이터 확보가 필요할 수 있었다는 점, 두 번째 제품개발의 책임은 (주)셀트리온에게 있어 220C의 반품가능성도 존재했다는 점, 세 번째 재무적 투자자와의 약정준수 목적으로 기간분식을 했을 가능성은 셀트리온그룹은 2012년, 2014년에도 약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감안시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었음. 감사인에 대해서도 (주)셀트리온과 동일하게 지적사항에서 제외하였음. 다음 종속기업의 재고자산평가손실 미계상 관련 사항임. 지적사항은 종속회사인 (주)셀트리온제약이 보유한 허쥬마 100A가 재고자산평가손실 대상임에도 (주)셀트리온은 연결재무제표에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임. 식약처 의견은 원칙적으로 승인 받은 유효기간 도과 前 연장승인을 받아야 되며, 유효기간 도과 후 소급적용은 불가('22.1.5.공문)하다고 하였음. 다만, 의약품 변경허가 전 생산제품은 변경허가 후 변경사항이 적합하다면 판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18.9.4. 공문)고 하였음. 감리위원회는 다수의 위원이 회계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고 자문하였음. 증선위는 (주)셀트리온 및 감사인의 위반동기를 수정하였음. (주)셀트리온의 위반동기는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중과실'로 판단하였음. 그 이유는 첫째 (주)셀트리온과 (주)셀트리온제약은 지배·종속관계이며 경영진도 상호교류하고 있는 등 위반동기를 (주)셀트리온제약과 동일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점, 식약처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경과제품은 판매불가하지만 과거 유효기간을 소급 연장 받았던 사례와 EMA 등 해외 보건당국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연한 입장 등을 감안할 때 외부판매가 가능하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고의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음. 다만, 셀트리온그룹이 다량의 재고자산이 유효기한에 임박하였음에도 유효기간 관리 및 회계검토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셀트리온그룹의 재고 과다보유가 당시 시장의 주요 관심사항이므로 평가손실 인식 여부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정보라는 점에서 2016년 (주)셀트리온의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수정하였음. 감사인의 위반동기는 '과실'로 수정하였음. 그 이유는 종속회사 감사인에게 감사업무지시서를 발송하고 종속회사 감사인의 판단결과 검토 등 지배회사 감사인으로써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감사절차는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다만, 종속회사 감사인의 판단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을 감안시 위반동기를 '과실'로 수정하였음. 다음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개발비 과대계상 관련사항임. 지적사항은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개발비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므로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만 개발비 인식 가능하고 1상 개시 전에는 개발비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감리위원회는 다수의 위원이 금감원

원안에 동의하였음. 증선위원회 논의 결과 위반 동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였고 (주)셀트리온 및 감사인의 지적금액을 일부 수정하였음. 그 이유는 발생주의 관점에서 임상 1상에 사용된 비용은 임상 1상 개시 승인 시점보다 전에 지출되었더라도 개발비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때문이었음. 감사인에 대해서도 지적금액을 (주)셀트리온과 동일하게 수정하였음. 마지막으로 (주)셀트리온제약의 지적사항에 관한 사항임. 첫 번째, 재고자산평가손실 미계상 관련사항임. 지적사항은 (주)셀트리온제약이 보유한 허쥬마 100A가 재고자산평가손실 대상임에도 재무제표에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임. 식약처 의견은 앞서 (주)셀트리온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음. 감리위원회는 다수의 위원이 회계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자문하였음. 증선위는 (주)셀트리온제약 및 감사인 위반동기 수정하였음. (주)셀트리온제약 위반동기는 고의적 회계위반으로 볼 수 없고, ‘중과실’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그 이유는 식약처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경과제품은 판매불가하지만 과거 유효기간을 소급연장받았던 사례와 EMA 등 해외 보건당국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연한 입장 등을 감안할 때 외부판매가 가능하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따라서 고의적 회계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음. 다만, 셀트리온그룹은 다량의 재고자산이 유효기한에 임박하였음에도 유효기간 관리 및 회계검토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셀트리온그룹의 재고 과다보유가 당시 시장의 주요 관심사항이므로 평가손실 인식 여부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정보라는 점에서 2016년 (주)셀트리온제약의 위반동기는 ‘중과실’로 수정하였음. 감사인 위반동기는 ‘과실’로 수정하였음. 그 이유는 (주)셀트리온제약이 감



사인에게 100A, 200A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자료(85개월 1batch)를 제출하였던 점, 바이오전문가가 아닌 감사인이 통상적인 감사절차만으로는 재고자산평가손실 누락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도 감안하였음. 두 번째, 특수관계자 주식 미기재 관련사항임. 지적사항은 판매가능재고와 판매불능재고를 (주)셀트리온헬스케어와 비정상적으로 교환하고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점임. 회계기준원 의견은 앞서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음. 감리위원회는 다수의 위원이 회계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음. (주)셀트리온제약에 대해서 일부 위원은 ‘중과실’, 일부 위원은 ‘과실’로 자문하였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금감원 원안에 동의하였음. 증선위는 (주)셀트리온제약의 위반동기를 수정하였음. (주)셀트리온제약에 대해서 고의적 회계위반으로 볼 수 없고, ‘중과실’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음. 그 이유는 첫 번째 재고교환은 정형화된 공시대상이 아니며 (주)셀트리온 및 (주)셀트리온헬스케어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교환한 점을 감안시 위법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주)셀트리온제약에게 유리한 교환사실인 만큼 (주)셀트리온제약이 고의적으로 주식을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임. 다만, 허쥬마 100A와 200A, 트룩시마 220C와 230C는 허가관점에서는 동종품목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외부감사인에게 품목별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회계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점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셀트리온그룹의 재고 과다보유가 당시 시장의 주요 관심사항였다는 점에서 2017년 (주)셀트리온제약의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수정하였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원안에 동의하였음. 개발비 과대계상에

대해서는 감리위와 증선위 모두 금감원 원안에 동의하였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음.

-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된 바와 같이 증선위 결정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방금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17년~18년 (주)셀트리온의 위반동기는 '중과실'로 수정'이라고 하셨는데 감사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감사인의 위반동기는 '원안 동의'가 되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원안임.

- (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다 회사와 감사인에 대해서 조정을 했든지, 원안 동의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없으므로 감사인의 위반동기는 '원안 동의'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음.
- (위원장) 제13호 안전부터 제15호 안전은 지금 보고받은 내용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셀트리온에 대한 개발비 과대계상과 관련하여 감사인에 대한 위반동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감원 원안에 동의한다는 점을 추가하면서 지금 보고 받은 내용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기업회계팀장이 보고한 내용은 수정의결 주문에 포함되므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음.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음. 셀트리온 3社の 회계감리는 과징금 154억 원, 제재 대상자 50명, 조사기간 4년 8개월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회계감리 역사

에 하나의 큰 도전이자 이정표라는 생각이 듭.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서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시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회계처리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것이 사실임. 이에 증선위는 바이오시밀러의 개발부터 임상, 배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국내·외 보건당국의 허가제도를 검토하고, 바이오기업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상장요건과 상장심사의 구체적인 절차도 하나하나 면밀히 점검하였음. 이 과정에서 회계기준원은 물론 국내·외 보건당국, 한국거래소 등 여러 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고 외부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금감원과 피조치자의 상반되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였음. 아울러, 피조치자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감리위원회 단계부터 모든 피조치자에게 대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음. 그 결과 대부분의 피조치자가 대심제를 통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하는 등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음. 증선위는 이 모든 심의 과정을 소화하기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의 감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19차례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셀트리온 안전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음.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심의에 임해 주신 증선위원 여러분 그리고 금감원과 금융위 직원들,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심의에 도움을 주신 감리위원들, 식약처,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직원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림. 마지막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번 안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과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심의를 종료하겠음. 개선 과제의 내용은 기업들의 회계처리,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회계감리에 대한 사

항이며, 이 과제들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정의결주문에 포함되는 내용임. 우선, 셀트리온그룹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는 문제가 있음. 회사의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외부감사 과정에서도 생산 공정의 변경, 보건당국의 허가과정, 판매사와의 계약내용 등 회계처리의 기본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외부감사인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음. 회계의 기본원칙은 기업의 활동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공시하여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셀트리온그룹이 회계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회계정책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함. 첫째, 현재의 회계정책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3개월 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시기 바람. 특히, 금번 감리의 지적사항에 포함된 바이오시밀러의 생산과 보건당국의 허가과정,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공시 분야는 관련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투자자가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함. 둘째,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1년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금감원은 회사의 개선계획과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각각의 보고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에 말씀드립니다. 이번 안전 조사·심의 과정에서 금감원 회계감독 부서의 고생이 많았음. 원안대로 의결되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임. 그러나 '고의'로 조치하는 것만이 금감원의 역할은 아님. 이 사건으로 인해 바이오업계의 회계처리 관행이 투자자 친화적으로 개선된다면, 금감원의 노력은 우리 바이오산업의 도약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임. 다

만, 이번 셀트리온그룹 감리와 관련하여 긴 감리기간과 감리조사 중 다소 부족했던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러한 시장의 문제제기는 타당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감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기업과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피조치자의 방어권은 감리위·증선위 심의단계 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조사단계에서도 보장되어야 함. 금감원은 검찰, 국세청 등 여타 기관의 조사기간 상한,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고함. 다음으로 회계업계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에서 회계법인들은 바이오시밀러산업에 대해 이해가 부족함에도 회사가 제공한 자료만을 믿고 외부감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관련 회계법인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되었음. 비록, 바이오시밀러산업이 신산업이었지만 산업에 정통하지 못한 감사인이 회사가 제공한 자료만을 기초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향후에는 해당 산업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포함된 감사팀을 구성하여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람. 정부도 전문분야에 특화된 감사팀을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음. 한편, 금번 제재로 인해 회계법인들이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시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함. 기업이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과 외부감사인, 투자자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됨. 새로운 산업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現상황에서 회계기준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만 이러한 불확실성

은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어야 함. 앞으로는 증선위가 회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겠음. (가칭)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회계기준원에 두고 운영해 나가겠음.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은 회계기준원을 비롯하여 금융위·금감원·회계법인·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임. 외부감사 과정에서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쟁점 사항이 있거나 기업·회계법인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하여 증선위에 보고 후 시장에 안내할 예정임. 아울러, 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과정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기준해석지침을 마련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필요시 증선위에 보고토록 할 예정임.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의 첫 번째 과제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제약·바이오분야가 될 것이며, 차차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예정임. 이상으로 제13호 안건부터 제15호 안건까지 심의·의결을 종료하겠음. 장기간 심의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림.

○ 각각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6시 22분 폐회)